

『정보사냥』

(하승수·조영삼·성재호·전진한, 환경재단 도요새, 2009)

임 희 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1조에 정의되어 있는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목적이다.

다시 말해서 투명하고 책임있는 국정운영과 공직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하는데, 이것은 곧 정부가 생산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취지에 의해 1996년 법이 제정되었고 1998년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되어 어느덧 13년이 되었다. 2006년 4월부터는 정보목록의 검색부터 청구 및 공개자료 열람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안에서 원하는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국민들의 정보공개 청구는 처음 시행된 1998년에 비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본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정보공개 요구 증가에 따라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하려는 일반 시민, 언론인, 시민단체 활동가 등에게 필요한 지

식과 노하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각자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4명에 의해 ‘정보공개’라는 동일한 주제와 관련하여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현장에서의 경험담을 재미있게 전개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과 제도에 대한 이야기지만 독자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머리말에서도 저자들은 각자 활동하면서 ‘정보공개’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며 또한 정보공개제도의 정착이 우리사회의 중요한 숙제라는 신념을 가지고 ‘정보공개’ 바이러스를 더 많은 사람에게 퍼뜨리기 위해 집필하였다는 기획의도를 밝히고, 따라서 최대한 쉽게 쓰려고 노력했다고 말하고 있다.

본문 구성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4개의 소주제에 대해 4명의 저자가 집필하였으며 ‘정보공개 판례 베스트 10’이 부록으로 실려 있다.

첫 번째 단락은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소개와 설명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정보공개제도의 이해를 도왔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정보공개제도의 활용을 위해 청구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이며 이러한 정보가 기관에서 생산되는 과정과 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기관에 청구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특종 보도를 했던 이야기, 즉 정보공개제도의 활용사례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었고, 마지막 단락은 정보공개 청구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한 노하우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내용은 ‘열려라 참깨-시민의 힘으로 정보 얻기’라는 소재목으로 우리나라 정보공개 청구의 산 증인인 하승수¹⁾ 변호사가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 시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

1)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정보공개법 도입 초

공개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시민이 이용하는 것이며, 민주주의가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고 시민이 주체가 되어 꾸러갈 수 있도록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공개제도의 역사와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국가차원에서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정보공개청구 방법과 절차 등의 운영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 시행 이후 10년간 축적된 판례 중에서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함으로써 정보공개 청구를 받고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내용은 기록관리 전문가인 조영삼²⁾ 교수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청구할 것인가’라는 소재목으로 정보공개청구 대상의 선정과 방법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설명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원하는 정보를 얻으려면 먼저 해당 기관의 속성에 대해 파악하여 그들이 어떻게 정보를 생산하며 어떤 정보가 핵심인지를 알아야한다고 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업무와 기능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한 소관 법령과 직제를 살펴보고, 각 부서별 업무와 생산되는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기관의 기능분류 체계에 따른 생산기록의 유형과 생산시스템의 구조 및 정보 등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어렵게 여겨질 수 있음을 우려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그림과 상세한 설명으로 함께 하였다.

기관에서 생산되는 회의록이나 조사·연구 검토서와 같은 주요기록

기 우리나라 정보공개청구 및 소송운동을 이끌어 주옥같은 판례를 만들어 냈다.
2) 한신대학교 국사학과 조빙교수, 국회기록보존소 기록연구사, 청와대 기록연구사, 교육과학기술부 기록연구사 등을 역임

의 목록과약을 위해서는 먼저 국가기록원에 통보하기 위해 작성되는 생산현황 통보 내용을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은 ‘특종 만들기-정보공개를 이용한 취재보도’라는 소제목으로 성재호³⁾ 기사가 집필한 내용인데, 실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정보를 가지고 많은 특종보도를 이끌어 냈던 경험담을 소개하여 우리에게 정보공개청구가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다른 언론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는 특종을 만들기까지의 과정과 어려움에 대해 서술하고 그동안의 정보공개청구 경험에 의한 정보공개청구 테크닉을 소개하였다. 공공기관의 부실한 정보목록과 자의적인 비공개 남발, 능력 부리기에 의한 처리기한의 연장 등은 언론사 기자들이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실제 공공기관에서 잘못된 공개의 사례를 그림과 함께 소개하여 기관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하였다. 이렇게 잘못된 사례만 소개하기보다는 잘된 사례도 같이 소개하였다면 한 눈에 비교할 수 있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마지막 내용은 대표적인 정보공개청구 활동가인 전진한⁴⁾사무국장이 그동안의 활동에서 얻은 수많은 노하우를 정리하여 집필한 ‘정보공개청구 실전매뉴얼’이다.

본문에서 저자는 정보공개청구를 잘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와 ‘공개’의 의미, 공공기관의 범위, 문서 및 이에 준하는 매체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 노하우에 대해, 여러 기관

3) KBS 보도본부 기자

4)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간사, 한국 국가기록연구원 선임연구원을 역임하였으며 한국언론재단 정보공개법 강사로 활동

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청구하는 '패키지 청구'가 기관의 자의적인 비공개를 줄일 수 있으며, 비공개 부분은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또 분량을 적게 청구하는 것이 기관에서의 비공개 결정을 줄이고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정보공개제도의 시행은 분명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행하는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정보공개청구건수는 정보공개법 도입 초기에 비해 매년 급증하여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커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의 정보공개에 대한 오래된 관행과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으며, 정보공개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비공개되는 이유의 대부분이 '해당정보 부존재'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는 기록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이나 대책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날로 높아가는 시민의식을 정부가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정부차원에서 기록관리에 관심을 갖고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모두 제공하여 국정의 투명성을 증명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 국민은 알권리 보장을 통한 정보공개제도의 활용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주권을 찾는 일에 본서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